



2022. 4. 29

국회에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총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문지은(총괄)
박정환(수입)

추계 | 윤주철 태정림 이택균 김계남 문지은
지수현 김효진 우병혁 이윤경 박선아
정현하 장삼열 이미연 여은구 이우영
백수연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김문경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지원 | 양승미 이지은 이지수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 02) 6788-3766 | e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 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4.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추계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비용추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가결 이후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발 간 사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원발의안과 위원회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업무를 전담시켜 비용추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통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는 2021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 중 예산에 미반영된 사례들의 원인을 조사하여, 법률과 예산 간 유기적인 연계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실시 결과, 283건이 재정수반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지출법률 98건은 2021년과 2022년 예산에 2.6조원, 5.5조원 각각 반영되었고, 이는 총지출 증가분의 5.0%(2021년), 37.1%(2022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수입법률 21건의 영향으로 연평균 6.9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법률 133건의 영향으로 연평균 7.7조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소요점검은 입법에 따른 재정영향을 점검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법률과 예산 간의 연계성 점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차 례

요 약 / i

I. 서 론 / 1

-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1
-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4

II.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 7

- 1. 재정수반법률 현황7
- 2. 재정수반요인 현황9
-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현황10

III.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13

- 1. 현 황13
- 2.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14
- 3. 재정소요점검 결과15
- 4.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29

IV.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33

- 1. 현 황33
- 2.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34
- 3. 재정소요점검 결과37
- 4.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48
-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2018~2021년56

V. 결 론 / 89

- 1. 요약89
- 2. 시사점91

[부록] 2021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93

표 차례

[표 1] 재정수반법률 추계 현황	8
[표 2] 재정수반요인 추계 현황	9
[표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0
[표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1
[표 5] 수입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현황: 유형별 주체별	14
[표 6]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 주체별	15
[표 7] 조세수입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18
[표 8]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0
[표 9]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1
[표 10]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1
[표 11]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2
[표 12]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4
[표 13]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5
[표 14]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7
[표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28
[표 16] 국세외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29
[표 17]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수입	30
[표 18]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외수입	31
[표 19] 지출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주체별	34
[표 20]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 주체별	37
[표 21]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39
[표 22] 의무지출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0
[표 23]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41
[표 24]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3
[표 25]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국가지출	45
[표 26]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7
[표 27] 지출법률 예산반영 현황	48
[표 28]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49
[표 29] 위원회별 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51

[표 30] 총지출 및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52
[표 31] 의무지출 관련 법률 예산반영 현황	53
[표 32] 지출법률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54
[표 33] 회계별·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55
[표 34]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56
[표 35]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미수립	59
[표 36]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수립단계	63
[표 37]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법령 등 기준 정비단계	67
[표 38]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69
[표 39]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법률 등 시행일 미도래	72
[표 40]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75
[표 41]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 ·	82
[표 42]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91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3
[그림 2] 재정수반법률 현황	8
[그림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0
[그림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2
[그림 5]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39
[그림 6]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42
[그림 7]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43
[그림 8]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지출	90
[그림 9] 예산반영 현황	90

요 약

- (의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 기준선(baseline)이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소요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전망
 -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법안비용추계는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을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변화’(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를 추계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이 포함
- (필요성)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결된 법률의 재정영향을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점검
 - 법률 제·개정이 다시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무지출의 경우 입법의 재정영향 관리가 필요
 - 재량지출 관련 법률의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을 통해 통제 가능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차년도 예산과 중기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우리 예산과정은 가결 법률이 예산에 미치는 재정부담을 총괄적으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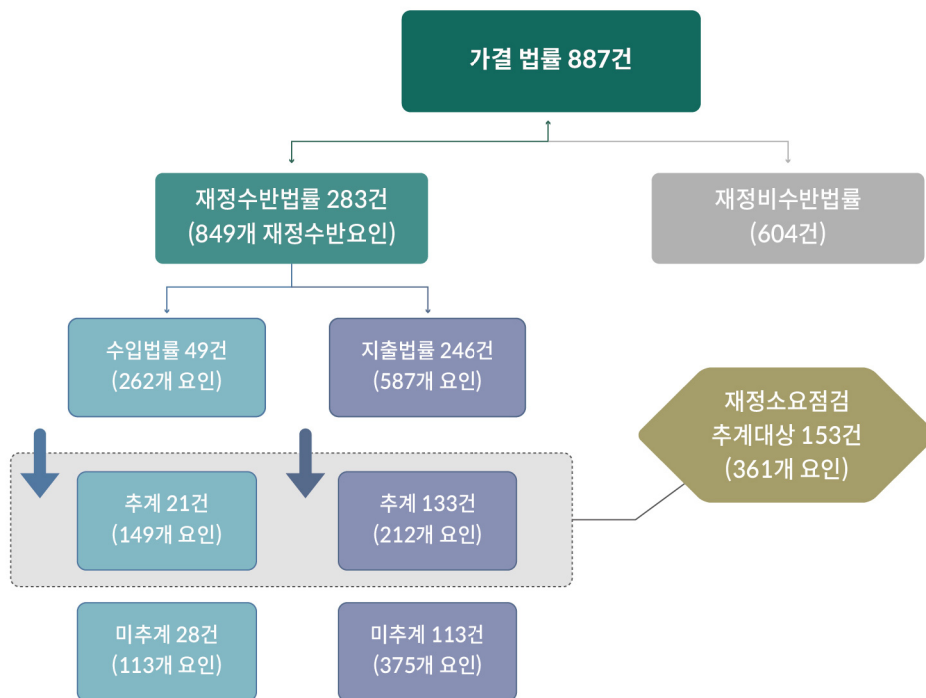
검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에 대한 확인 필요

- 재정소요점검 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예산반영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입법과정과 예산간의 연계 강화

□ (재정소요점검 대상) 2021년 가결된 법률 887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83건이며, 2022년부터 재정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은 153건(361개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법률(283건) 중 130건은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므로 재정소요점검 추계대상에서 제외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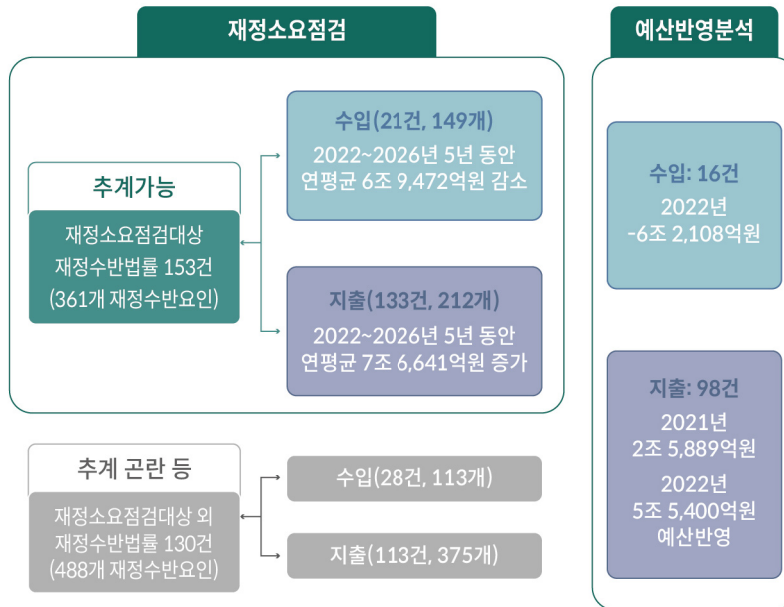


주: 1. 재정수반법률 283건에는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2건 포함
2. 재정소요점검 추계대상 153건에는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 가결 법률로서 추계가 가능한 153건 중 수입 법률 21건 및 지출법률 133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입법률 21건(149개 요인)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9,47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9조 3,462억원 감소 예상,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990억원 증가 예상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¹⁾, 국가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5조 1,166억원 감소 예상, 지방세수입은 5년간 연평균 1조 8,305억원 감소 예상
 - 지출법률 133건(212개 요인)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조 6,64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국가지출은 연평균 6조 2,416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1조 4,225억원 증가 예상
 - 의무지출은 연평균 3조 4,410억원(국비 2조 8,118억원, 지방비 6,293억원), 재량지출은 연평균 4조 2,230억원(국비 3조 4,298억원, 지방비 7,932억원) 증가 예상
 - 지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연평균 2조 3,871억원(38.2%)으로 전체 국가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연평균 1조 7,120억원(27.4%), 일반·지방행정분야 연평균 9,619억원(15.4%) 순
- (예산반영분석 결과) 2021년 가결된 283건의 재정수반법률 중 114건이 예산에 반영

1) 「지방세법」(2021.11.11.의결)과 「부가가치세법」(2021.12.2.의결) 의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021년 21% → 2022년 23.7% → 2023년 이후 25.3%)은 국세수입 감소분과 지방세수입 증가분이 동일하여 재정수입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21년 재정소요점검 결과 및 예산반영분석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16건 제·개정에 따라 2022년 국세수입 6조 2,202억원 감소하고, 국세외수입은 94억원 증가하여 총수입 6조 2,1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세수입)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 상향한 「소득세법」,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 「법인세법」 개정 등으로 2022년 총수입 예산 6조 2,202억원 감소
 - (국세외수입: 기금수입)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2년 총수입 예산 94억원 증가
- 지출법률 98건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예산으로 2021년 2조 5,889억원, 2022년 5조 5,4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5.0%(2021년), 37.1%(2022년) 수준
 - (의무지출) 2021년 가결된 의무지출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21년 2조 4,547억원, 2022년 3조 809억원 반영
 - (재량지출) 2021년 가결된 재량지출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2021년 1,342억원, 2022년 2조 4,592억원 반영

□ (시사점)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입법 활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수입법률의 경우는 비교적 확정된 미래의 지출사건 또는 수입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소요의 산출이 가능한 편임
 - 반면 재량지출이나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사업 등과 같이 지출사건 또는 수입사건의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는 개연성이 높은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정추계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중 375개 재정수반요인은 대부분 재량지출 관련 건으로 지출사건의 불확정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나, 향후 재정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도 필요
- 또한 현재 예산과정과 입법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제도상·운영상 한계 때문에 재정소요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예산과정 및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의회와 같이 위원회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며, 현행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기준선 전망을 바탕으로 입법의 재정영향을 평가하는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법률안 심의를 규범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임
 - 재정소요점검과 비용추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입법과정에 실효성 있게 반영됨으로써 입법 활동으로 인한 재정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회법」 제83조의2²⁾는 예산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수반법률안 심사 시 예산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 (정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²⁾을 의미
 -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법안비용추계³⁾와 유사
 -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⁴⁾ 가결 후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수반요인을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구별
 - (법안비용추계) 법안 발의단계에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 즉 ‘지출 순증 또는 수입 순감’이 추계 대상⁵⁾

-
- 1) 기준선(baseline)이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소요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전망
 - 2)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전체 금액(총 재정소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을 의미
 - 3)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4)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법률안이 아닌 ‘법률’로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
 -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⁶⁾를 고려하여 ‘지출 또는 수입의 순증 및 순감’을 추계

□ (점검대상)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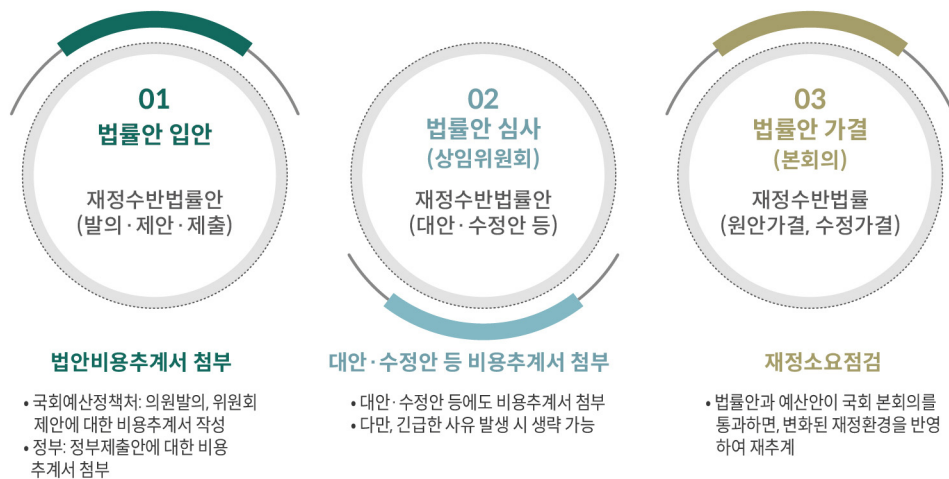
- ‘재정수반법률’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초래하는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한 법률로서, 재정수반법률은 2개 이상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은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거나, 여러 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별 추계 결과를 점검
- 재정소요점검 대상 재정수반법률은 의원발의안·위원회제안·정부제출안⁷⁾ 등을 모두 포함
 - 법률안이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위원회제안 등도 사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⁸⁾
-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의 속성별(수입법률·지출법률), 수입유형별(조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지출유형별(의무지출·재량지출), 재정부담 주체별(국가·지방자치단체)로 제시됨

□ (점검시점)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이 가결된 시점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실시하여 기준선을 정비하고, 가결 법률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확인

6) ‘재정환경 변화’는 발의단계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함을 의미
 7) 법안비용추계는 의원발의안과 위원회제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제출안은 정부가 관련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가결 후 이뤄지는 재정소요점검은 의원발의안, 위원회제안은 물론 정부제출안으로 가결된 모든 재정수반법률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함
 8) 다만, 모든 재정수반법률의 예상 소요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제·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재정사업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법안 가결 후: 법안 발의단계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업 계획 등이 법안 가결 후 수립되거나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는 등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
- 예산안 확정 후: 제·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의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재추계
 - 가결 법률과 예산과의 연계성 점검
 - 정부 사업계획과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중기재정영향을 재추계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가.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무지출과 국회 예산과정을 통해서 통제되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영향을 점검할 필요
 - 의무지출 관련 재정수반법률 입법은 다음 법률 제·개정이 있기 전까지 경직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침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추계액으로 실제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가 차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

나.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정보를 제공

-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추제한 재정정보를 제공
 -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안 발의단계의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하므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는 경우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 변동,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 필요
 - 위원회제안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⁹⁾에 따라 긴급한 사유의 발

9)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생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⁰⁾,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다. 가결 법률과 예산 간 연계성 점검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법안비용추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예산안 확정 후 법률안이 가결되어 예산심의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후에 마련하는 경우, 법률안 가결을 전제로 예산을 확정하였는데 관련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등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 발생
- 가결된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의 예산안 편성여부를 점검
 - 재정수반법률의 제·개정은 재정투입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예산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우리 예산과정은 예산과 법률이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양자 간 연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¹¹⁾

10)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1) 예산법률주의와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총량 내에서 위원회별 예산 및 재정수반법률안을 의회가 심의·확정하므로,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코어키퍼(Scorekeeping) 제도를 도입. 의회가 설정한 재정총량인 예산결의안 한도 내에서 페이고(PAYGO) 준칙과 스코어키퍼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재정수반입법을 관리. 향후 우리 예산과정에서도 위원회별 지출한도 도입을 전제로 재정총량 내에서 재정수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스코어키퍼(Scorekeeping)과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은 계류 중인 재정수반법률안과 현행 법률에 따른 예산상의 영향-연방 세출, 세입 및 적자규모-을 점검하는 장치이다.¹²⁾ 스코어키퍼를 통해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재량지출), PAYGO¹³⁾ 준칙(의무지출, 세입)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거시재정계획으로서 예산 총계, 세출의 기능별 배분, 예산 조정지침으로 구성된 '예산결의안'을 작성하는데, 예산결의안이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예산결의안의 한도 수준과 예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를 제기(point of order)하여, 해당 법안의 심사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¹⁴⁾ 예산심사가 종료된 후 집행한도를 넘는 지출이 결정되면 OMB(관리예산처,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스코어키퍼를 통해 해당 재정소요에 대한 일괄삭감조치(sequestration)도 취할 수 있다. 의회 예산위원회는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확인하는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을 총괄한다.

12) CBO. "CBO Explains Budgetary Scorekeeping Guidelines", 2021. 1.

13) PAYGO(Pay-As-You-Go)는 2010년 법률로 전환되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입을 감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세입증가나 다른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을 상쇄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삭감(Sequestration)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한 제도

14)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2012.

II.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1. 재정수반법률 현황

-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 887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83¹⁵⁾건이며, 전년 재정수반법률 302건¹⁶⁾ 대비 19건 감소
 - 전체 가결된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의 비중은 31.9%로 전년 29.1% 대비 2.8%p 증가
 - (수입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49건
 - 수입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83건 중 49건으로 17.3%를 차지
 - (지출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246건
 - 지출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83건 중 246건으로 86.9%를 차지
- 재정수반법률 283건 중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법률조문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수입법률 21건, 지출법률 133건 등 총 153건¹⁷⁾의 법률이 재정소요점 검 추계대상

15)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2건 포함

16) 2020년 국회가 가결한 1,039건의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302건(29.1%)으로, 이 중 수입의 재정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62건, 지출의 재정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258건으로 분석됨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8건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 9쪽.

17)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표 1] 재정수반법률 추계 현황

(단위: 건, %)

재정수반법률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법률 (비중)	49 (17.3)	246 (86.9)	283 ¹⁾ (100.0)
추계	21	133	153 ²⁾
미추계	28	113	130 ³⁾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2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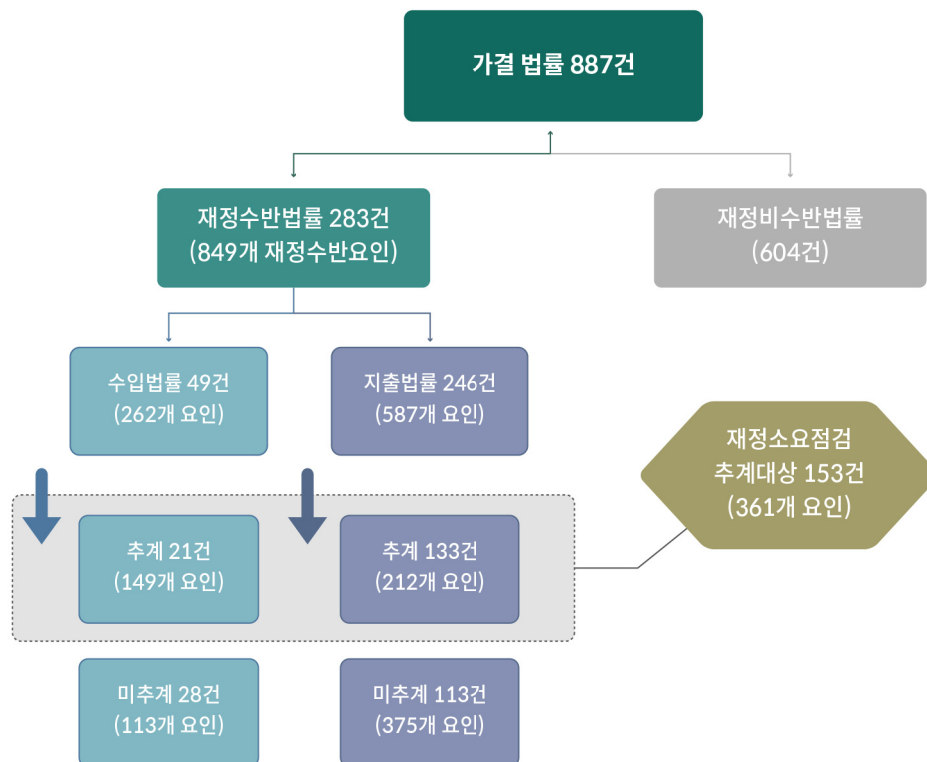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3)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1>

[그림 2] 재정수반법률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수반요인 현황

- 2021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는 849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법률 조문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계가 곤란한 488개 요인을 제외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¹⁸⁾)가 추계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361개
- 2021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849개로 법률 1건당 평균 3.0개 요인을 포함
 - (수입법률) 2021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262개로 법률 1건당 평균 5.3개
 - (지출법률)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587개로 법률 1건당 평균 2.4개
 - 수입법률의 경우 법률 1건당 재정수반요인이 지출법률보다 약 2.9개 더 많은데, 이는 수입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법에 다수의 재정수반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¹⁹⁾

[표 2] 재정수반요인 추계 현황

(단위: 개, %)

재정수반요인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요인 (비중)	262 (30.9)	587 (69.1)	849 (100.0)
추계	149	212	361
미추계	113	375	4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8)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영문명 약어

19)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위원장, 2021.12.2.의결)의 경우 85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현황

□ (제안자별) 재정수반법률 283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제안이 169건(5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발의 102건(36.0%), 정부제출 12건(4.2%) 순

○ 가결 법률 887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의원발의가 431건(4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위원회제안 402건(45.3%), 정부제출 54건(6.1%) 순

[표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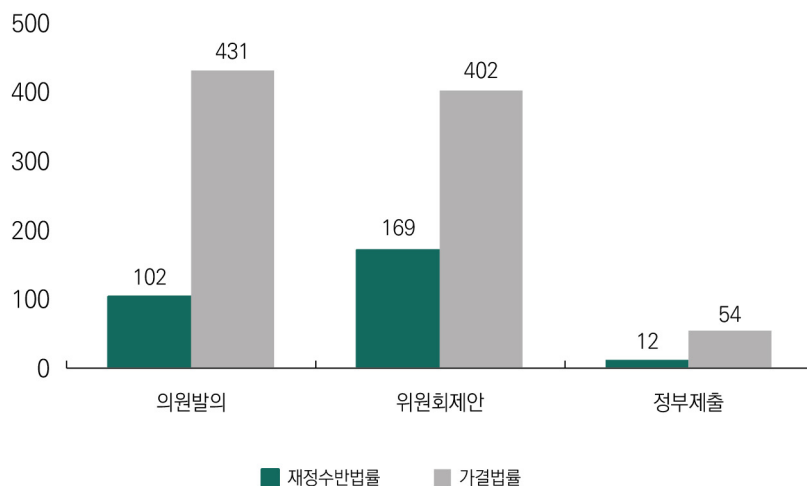
구분	의원발의	위원회제안	정부제출	합계
재정수반법률 (비중)	102 (36.0)	169 (59.7)	12 (4.2)	283 (100.0)
가결 법률 (비중)	431 (48.6)	402 (45.3)	54 (6.1)	887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2>

[그림 3]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건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1건), 국토교통위원회(31건), 행정안전위원회(30건) 순
-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62.5%), 교육위원회(57.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6.9%) 순²⁰⁾

[표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

위원회	가결 법률(A)	재정수반법률(B)	비중(B/A)
국회운영위원회	7	3	42.9
법제사법위원회	42	9	21.4
정무위원회	83	11	13.3
기획재정위원회	32	20	62.5
교육위원회	35	20	57.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9	11	15.9
외교통일위원회	9	2	22.2
국방위원회	23	8	34.8
행정안전위원회	75	30	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7	21	27.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8	22	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2	41	56.9
보건복지위원회	94	27	28.7
환경노동위원회	57	21	36.8
국토교통위원회	111	31	27.9
정보위원회	4	1	25.0
여성가족위원회	8	4	5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1	100.0
합 계	887	283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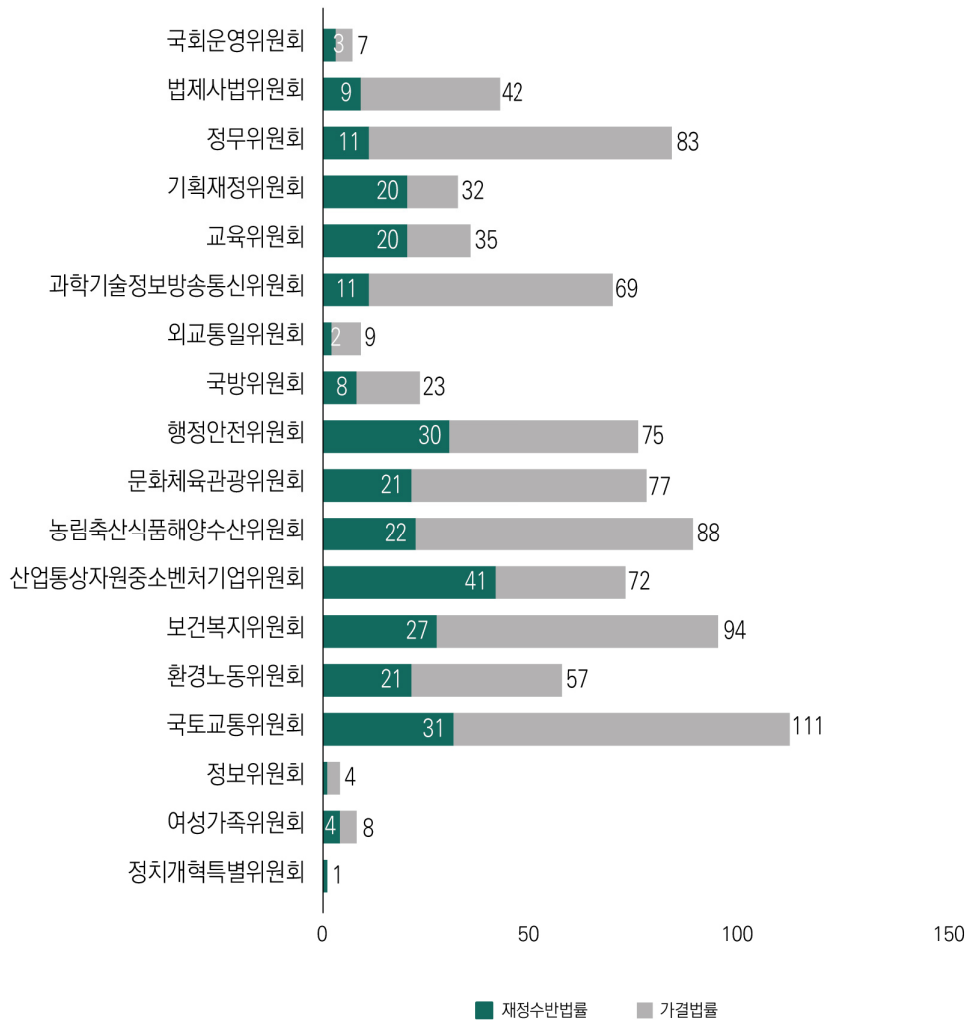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3>

20) 가결법률 건수(1건)와 재정수반법률 건수(1건)가 동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외

[그림 4]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현 황

- 2021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에 영향을 미친 법률은 49건(재정수반요인 262개)
 - 법률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초자료 부재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28건(재정수반요인 113개)을 제외한 21건의 149개 재정수반요인이 재정소요점검 대상
- (수입유형별) 재정수반법률 중 조세수입 관련 법률은 27건, 세외수입 관련 법률은 23건, 기금수입 관련 법률은 2건²¹⁾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조세수입 관련 법률 19건, 기금수입 관련 법률 2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을 수반하는 법률은 38건,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수반하는 법률은 14건²²⁾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국가 수입 관련 법률 16건, 지방자치단체 수입 관련 법률 5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

21)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건 포함(「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건 포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표 5] 수입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현황: 유형별·주체별

(단위: 건, 개)

구분	합계	수입유형별 ³⁾			재정주체별 ⁴⁾	
		조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반법률 ¹⁾ (재정수반요인)	49 (262)	27 (232)	23 (28)	2 (2)	38 (182)	14 (80)
재정소요점검 법률 ²⁾ (재정소요점검 요인)	21 (149)	19 (147)	-	2 (2)	16 (93)	5 (56)

주: 1) 수입변동을 초래하는 수입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2) 추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수입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3)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건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가. 투자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분야 등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

나. 고용지원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1~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

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소득세법」),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등
 - (「소득세법」)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율을 기존 15~30%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20~35%로 5%p씩 상향
 -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에 대하여 기존보다 높은 우대 공제율(1.3%) 및 공제한도(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말에서 2023년말까지 2년 연장
 - 공제율: 기존 1% → 우대 1.3%, 공제한도: 기존 500만원 → 우대 1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3.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개요

- 2021년 가결된 수입법률 49건 중 21건 법률(149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²³⁾ 6조 9,47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6]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주체별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2022~2026)		합 계 (2022~2026)
			국가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93,442 (-51,147) ¹⁾	23,990 (-18,305) ¹⁾	-69,452
	국세외수입	기금수입	-19	-	-19
		세외수입	-	-	
	합 계		-93,462 (-51,166)	23,990 (-18,305)	-69,472

주: 1) ()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을 제외한 세수효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4>

23)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2~2026년까지 예상되는 재정소요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재정소요가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수입유형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²⁴⁾

- (조세수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고용분야 세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9,452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기금수입)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 가산율 및 연체금 상한액을 인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요인,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금수입 증가요인 등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9억원 기금수입 감소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

- 국가 수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9조 3,462억원 감소,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연평균 2조 3,990억원 증가 예상
 - (국가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조 3,462억원의 국가 수입 감소 예상
 -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²⁵⁾하면, 국가수입은 5년간 연평균 5조 1,166억원 감소 예상
 - (지방자치단체 수입)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990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수입 증가 예상
 -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간 연평균 1조 8,305억원 감소 예상

24)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25) 「지방세법」(2021.11.11.의결)과 「부가가치세법」(2021.12.2.의결)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단계적 인상(2021년 21% → 2022년 23.7% → 2023년 이후 25.3%)은 국세수입 감소분과 지방세수입 증가분이 동일하여 재정수입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조세수입

(1) 개요

- 2021년 조세수입 관련 법률의 가결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9,452억원의 조세수입²⁶⁾ 감소 예상
- 조세수입 증가는 「지방세법」, 조세수입 감소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법」)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2,837억원 수입 증가 예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 예상
 -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542억원 수입 증가 예상
 - (「부가가치세법」)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4,770억원 수입 감소 예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예상
 -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475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6,452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46억원 수입 감소 예상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

26) 세수효과는 NABO의 추정치임

[표 기] 조세수입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수반법률 (주요 재정수반요인)	제안자 (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조 세 수 입	국 세 수 입	「소득세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	위원장 (2021.12.2.)	-637	-3,18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		-44,770 (-2,475) ¹⁾	-223,850 (-12,374) ¹⁾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위원장 (2021.8.31.)	-918	-4,591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위원장 (2021.12.2.)	-424	-2,121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46,452	-232,262	
		기타 ²⁾	-240	-1,201		
		소 계	-93,442 (-51,147)	-467,212 (-255,736)		
	지 방 세 수 입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위원장 (2021.6.29.)	-250	-1,248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위원장 (2021.11.11.)	42,295	211,476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위원장 (2021.12.9.)	791
		「지방세특례제한법」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1.3.24.)	-2	-8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위원장 (2021.12.9.)	-18,845	-94,224
				소 계	23,990 (-18,305)	119,951 (-91,525)
		조세수입 합계			-69,452	-347,261

주: 1) ()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의 효과를 제외한 세수효과

2) 기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기본법」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5>

(2) 세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소득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소득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한도 신설 등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1년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및 관련 의약품비,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난임시술 및 관련 의약품비 20% → 30%,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및 공제한도 신설: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과 조합원 1인당 세액공제 한도액을 신설
 - 공제내용: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징수 시 세액의 5%를 공제
 - 적용기한 신설: 2024.12.31.까지
 - 공제한도 신설: 조합원 1인당 100만원 이내
- (재정소요점검 결과) 「소득세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37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 상향: 연평균 64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연평균 1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한도 신설: 연평균 22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표 8]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소득세법」 (위원장, 2021.12.2.)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 상향	-645	-3,223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2	-62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한도 신설	22	108
	기타 ¹⁾	-2	-10
합 계		-637	-3,187

주: 1) 개인 영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부가가치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등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소비세율: 2021년 21% → 2022년 23.7% → 2023년 이후 25.3%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
 - 우대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율 1% → 1.3%, 공제한도 500만원 → 1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부가가치세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4,770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연평균 4조 2,29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단, 국세수입의 감소분만큼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입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연평균 1,76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9]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부가가치세법」 (위원장, 2021.12.2.)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42,295	-211,476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1,765	-8,825
	기타 ¹⁾	-710	-3,549
합 계		-44,770	-223,850

주: 1)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외 대상 확대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종합부동산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과세기준액(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 (재정소요점검 결과) 「종합부동산세법」(2021.8.31.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1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연평균 91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0]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종합부동산세법」 (위원장, 2021.8.31.)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918	-4,591
합 계		-918	-4,5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관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관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대상 확대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전액 면제 종료시점을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3년 연장
 - 관세 환급대상 확대: 해외직구물품 반송 등으로 인하여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국제무역선 또는 항공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 적용
- (재정소요점검 결과) 「관세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2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41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관세 환급대상 확대: 연평균 6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1]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관세법」 (위원장, 2021.12.2.)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418	-2,091
	관세 환급대상 확대	-6	-30
합 계		-424	-2,1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조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등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청년 등 고용 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2021~2022년간 비수도권 우대공제대상(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 비수도권 우대공제대상 공제금액(1인당): 대기업 400만원 → 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 9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 → 1,300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40%, 기타 30%
 - 추가공제율: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3)%
단, 10% 이내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 및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R&D에 대해서는 기업유형별 기본공제율에 수입금액 대비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된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세액공제
 -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중견기업 25%, 기타 20%
 - 추가공제율: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
단, 10% 이내(코스닥·중견기업 15% 이내)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6,45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조 67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평균 7,76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신설(3,928억원)과 R&D 공제율 신설(3,840억원)의 세수효과를 합한 값임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4,10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2]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1.12.2.)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0,674	-53,369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7,768	-38,842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928	-19,642
	R&D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840	-19,200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102	-20,509
	기타 ¹⁾	-23,909	-119,542
합 계		-46,452	-232,262

주: 1) 농림어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사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기타 국세 관련 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주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조정,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기한 연장,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주세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84억원, 「국세기본법」(2021.12.2.의결) 개정으로 동 기간 연평균 148억원 국세수입 감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1.12.2.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80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기한 연장: 연평균 18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연평균 14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조정: 연평균 180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표 13]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주세법」 (위원장, 2021.12.2.)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기한 연장	-184	-919
「국세기본법」 (위원장, 2021.12.2.)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148	-7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원장, 2021.12.2.)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53	-266
「개별소비세법」 (정부, 2021.12.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31	-15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 2021.12.2.)	세관장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통보 범위 확대	-9	-45
「농어촌특별세법」 (정부, 2021.12.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형 장기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추가	-8	-4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 2021.12.2.)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조정	180	900
「국세징수법」 (위원장, 2021.12.2.)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13	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위원장, 2021.12.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	-1)	-
합 계		-240	-1,201

주: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평균 3조 2,12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별소비세는 동일한 세수효과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지방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지방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등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소비세율: 2021년 21% → 2022년 23.7% → 2023년 이후 25.3%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 단, 2024.1.1.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재산세율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
 - 특례내용: 기존세율 대비 0.05%p 인하된 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23.12.31.까지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법」(2021.6.29., 11.11., 12.9.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2,837억원 지방세수입 증가 예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연평균 4조 2,295억원 지방세수입 증가 예상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연평균 791억원 지방세수입 증가 예상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연평균 250억원 지방세수입 감소 예상

[표 14]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지방세법」 (위원장, 2021.6.29.)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250	-1,248
「지방세법」 (위원장, 2021.11.1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42,295	211,476
「지방세법」 (위원장, 2021.12.9.)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791	3,956
합 계		42,837	214,1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자동차매매업·건설기계매매업 종사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중고기계장비·중고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20% 감면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3.24. 및 12.9.의결)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46억원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6,316억원 지방세수입 감소 예상
-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4,599억원 지방세수입 감소 예상

[표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1.3.24.)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	-2	-8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1.12.9.)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16	-31,581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599	-22,993
	기타 ¹⁾	-7,930	-39,650
	소 계	-18,845	-94,224
합 계		-18,846	-94,232

주: 1)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
- (재정소요점검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1.8.의결) 등 기금수입 관련 2건의 법률 개정으로 기금수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9억원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표 16] 국세외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1.1.8.)	연체금 가산율 및 연체금 상한액 인하	-122	-6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원장, 2021.3.24.)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102	512
합 계		-19	-97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21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가. 국세수입

- 2021년 가결된 법률 중 2022년 총수입²⁷⁾ 예산에 반영된 국세수입 관련 법률은 15건으로 분석
- 2021년 국세수입 관련 법률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된 세법개정으로 6조 2,202억원 감소²⁸⁾
 - 소득세 분야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6,365억원 세수 감소
 - 법인세 분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 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6,572억원 세수 감소
 - 부가가치세 분야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조 5,941억원 세수 감소

27) 예산반영분석의 예산은 2022년 본예산(총수입) 기준

28) 지방자치단체 수입 관련 법률의 경우, 총수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기타 세목²⁹⁾에서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 연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의 철폐 및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세법개정으로 1조 3,324억원 세수 감소

[표 17]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수입

(단위: 억원)

세 목	2022년 세수효과 ¹⁾	주요 재정수반요인
총국세	-62,202	
일반회계	-62,422	
○ 내국세	-50,230	
1. 소득세	-6,36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
2. 법인세	-6,572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3. 상증세	-2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4. 부가가치세	-35,94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
5. 개별소비세	-1,19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6. 증권거래세	-	
7. 인지세	-131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8. 과년도수입	-	
○ 교통세	-8,572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관세	-1,6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의 철폐 및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 교육세	-1,456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종합부동산세	-520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특별회계	220	
○ 주세	-461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기한 연장
○ 농특세	681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주: 1)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국회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부 추계 세수효과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29) 이때 기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함

나. 국세외수입

- 2021년 가결 기금수입 관련 법률 1건에 따라 2022년 예산은 94억원 증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따라 보험료 수입 94억원 증가 예상

[표 18] 수입법률 예산반영 현황: 국세외수입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예산반영액	법률명 (재정수반요인)
국세외수입		94	-
	세외수입	-	-
	기금수입	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생연구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현 황

-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246건(재정수반요인 587개)
 -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113건³⁰⁾(재정수반요인 375개)을 제외한 법률 133건(재정수반요인 212개)이 추계대상
- (지출유형별)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의무지출³¹⁾ 관련 법률은 7건, 재량지출 관련 법률은 242건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의무지출 관련 법률 5건, 재량지출 관련 법률 131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³²⁾
- (재정주체별)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221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75건³³⁾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국가 지출법률 125건, 지방자치단체 지출법률 21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³⁴⁾

30)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 113건(재정수반요인 375개)의 재정수반법률의 경우, 정부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계획 수립 필요, 시범사업 준비, 비용 계산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정소요를 판별하기 어려워 재정소요점검 시 추계 대상에서 제외

31)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발생하는 재정지출

3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건 포함

3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50건 포함

3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13건 포함

[표 19] 지출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주체별

(단위: 건, 개)

구분	합 계	지출유형별 ³⁾		재정주체별 ⁴⁾	
		의무지출	재량지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반법률 ¹⁾ (재정수반요인)	246 (587)	7 (12)	242 (575)	221 (475)	75 (112)
재정소요점검 법률 ²⁾ (재정소요점검 요인)	133 (212)	5 (9)	131 (203)	125 (189)	21 (23)

주: 1) 지출변동을 초래하는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지출법률을 제외한 후 비용을 추계한 지출 재정수반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3건 포함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3건 포함

4) 재정수반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50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지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에 대한 경영상 피해 손실보상 (2021.10.8.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2022.3.22.시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학교보건법」 등)

- 「학교보건법」 개정: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둠(2021.12.9.시행)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인프라 구축(2022.3.25.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경영상 중대위기 발생 시 지원(2021.5.18.시행)

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2022.3.25.시행)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지원(2021.10.21.시행)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2022.7.5.시행)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을 특화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 기업 지원(2021.12.16.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수소자동차 연료비 지원(2021.10.14.시행)

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지원

-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아동수당법」 등)
 - 「아동수당법」 개정: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50만원 영아수당 지급(2022.1.1.시행),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2022.4.1.시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등(2022.6.15.시행)

□ 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노후준비 지원법」)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022.6.22.시행)

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도로교통법」 등)

-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 등 확대(2022.4.20.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2022.1.28.시행)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극복 등을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 등(2022.6.8.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2022.7.1.시행)
-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2021.9.24.시행)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2022.9.25.시행)

마.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년, 예술강사, 장애인 및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지원(2022.6.16.시행)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삭제(2021.12.21.시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 형태, 보수 및 처우 등의 고용안정성 확보(2022.7.19.시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제도화(2021.11.19.시행)

3.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개요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246건 중 133건 법률의 212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³⁵⁾,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조 6,641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0]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주체별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2022~2026)		합 계 (2022~2026)
		국가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28,118	6,293	34,410
	재량지출	34,298	7,932	42,230
합 계		62,416	14,225	76,641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6>

35) NABO가 2022년 확정예산을 고려하여 2021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에 대한 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나.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인 ‘재량지출’로 구분³⁶⁾
 - 추계가 가능한 133건의 재정수반법률 중 의무지출은 5건, 재량지출은 131건³⁷⁾

(1)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 의무지출 관련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4,41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이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2조 8,118억원(81.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6,293억원(18.3%)으로 추계
 -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³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8,11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한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293억원 지출 증가 예상

3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호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제4호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37)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3건 포함

38)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표 21]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비중
의무지출	34,410	172,051	100.0
국비	28,118	140,589	81.7
지방비	6,293	31,463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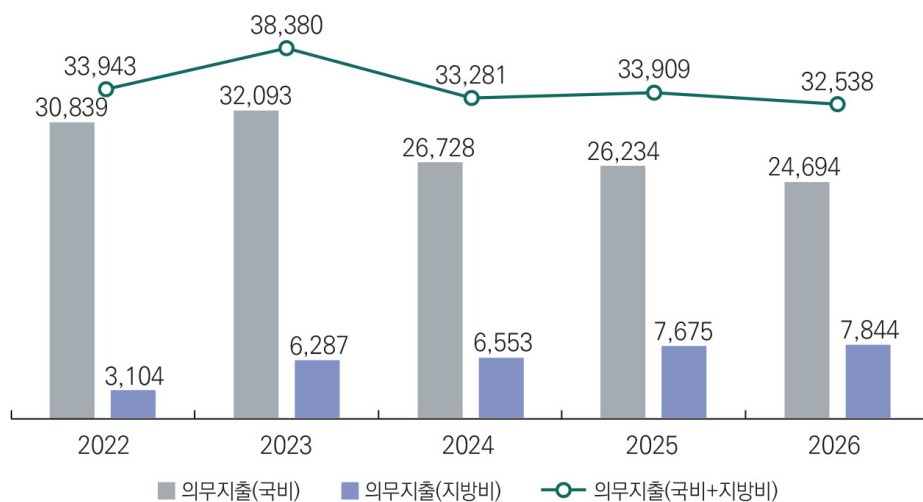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무지출 관련 추가재정소요(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는 2022년 3조 3,943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3조 2,53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2022.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022년 사업비가 2023년에 비해 적게 반영
 - 영아수당 단가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등 단계적 인상

[그림 5]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무지출 사업은 성질별로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이자지출 등 4가지로 구분³⁹⁾되며, 2021년 가결 의무지출 관련 소요를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복지외분야 의무지출로 구분한 결과 복지분야 의무지출 소요가 연평균 2조 1,974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의 63.9%를 차지

- (복지분야)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8세 미만) 확대 등 「아동수당법」 개정(연평균 2조 684억원),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연평균 988억원) 등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7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복지외분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2,436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2] 의무지출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성질별 분류		가결 법률명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복지분야 의무지출			21,974	109,871
	아동·보육료부문	「아동수당법」	20,684	103,420
	고용·노동부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290	6,452
복지외분야 의무지출			12,436	62,180
	기타의무지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436	62,180
의무지출 합계			34,410	172,051

주: 1. 의무지출의 세부분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분류를 적용
 2. 의무지출은 국비와 지방비 합계
 3.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분류로서,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노인부담, 아동·보육료부문, 고용·노동부문, 보훈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등으로 구성됨. 이자지출은 공적자금기금, 주택도시기금의 국공채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의무지출은 쌀소득보 전직불금, 유엔 PKO예산 분담금 등으로 구성됨

- 의무지출 관련 법률 건수(5건)⁴⁰⁾는 재량지출 관련 법률 건수(131건)의 3.8%에 불과하나,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소요(연평균 3조 4,410억원)는 전체 추가재정소요(연평균 7조 6,641억원)의 44.9%를 차지
 - 주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소관 개정 법률과 관련

(2)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 재량지출 관련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2,23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이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3조 4,298억원(8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7,932억원(18.8%)으로 추계
 - (국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4,298억원의 국비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등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932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3]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비중
재량지출	42,230	211,152	100.0
국비	34,298	171,492	81.2
지방비	7,932	39,660	18.8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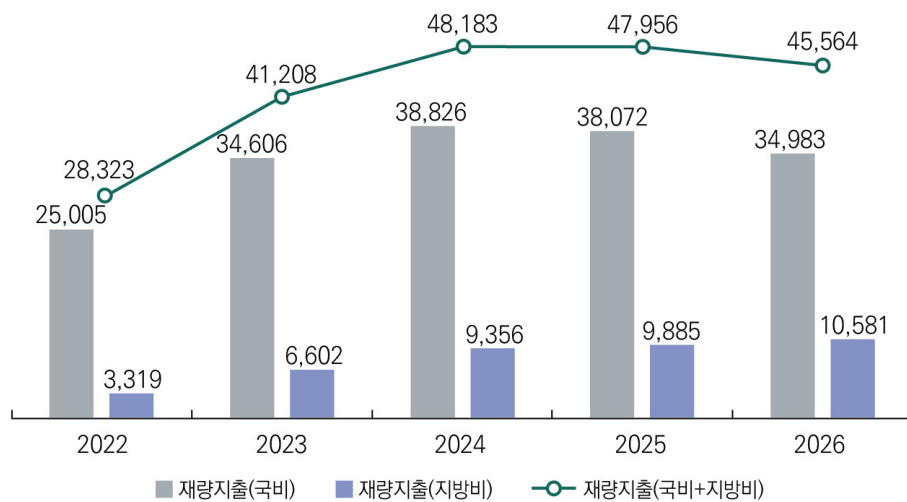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0) 의무지출 관련 개정 법률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건은 2건 포함

- 재량지출 관련 추가재정소요(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는 2022년 2조 8,323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4조 5,56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량지출 관련 법률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법령 정비 등으로 사업 첫 해에는 일부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의 사업비 추계액이 급등한 영향

[그림 6]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1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가는 연평균 6조 2,416억원, 지방자치단체는 연평균 1조 4,225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주로 국가가 부담(81.4%)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전체의 18.6%일 것으로 예상

[표 24]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비중
국가	62,416	312,080	81.4
지방자치단체	14,225	71,123	18.6
합 계	76,641	383,203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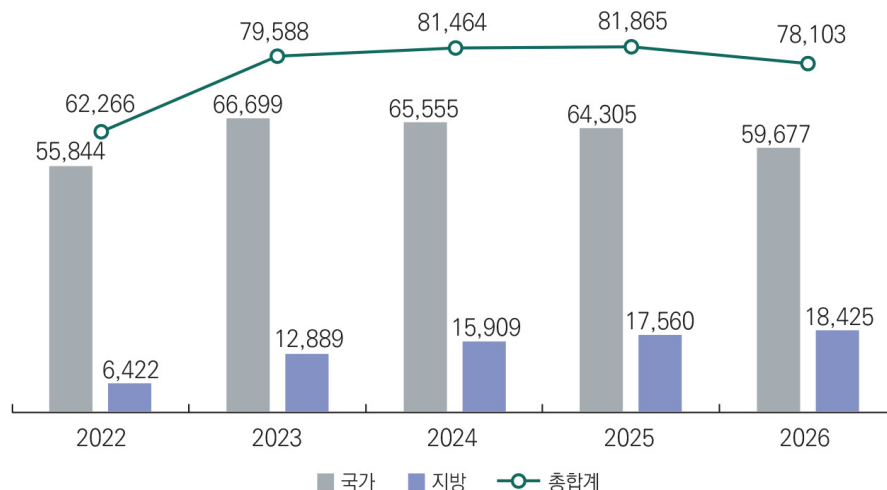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7>

□ 재정부담 주체별 추가재정소요(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는 2022년 6조 2,266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7조 8,103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비) 국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5조 5,844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5조 9,67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방비) 지방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6,422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1조 8,425억원 지출 증가 예상

[그림 7] 재정부담 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 2021년 가결된 국가의 재정변동을 발생하는 지출법률은 향후 5년 동안 16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일반·지방행정분야 순으로 영향을 미침

- 사회복지분야: 연평균 2조 3,871억원(38.2%) 지출 증가 예상
 -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확대한 「아동수당법」 개정: 국비 연평균 1조 4,39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출생아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등을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국비 연평균 4,26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연평균 1조 7,120억원(27.4%) 지출 증가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비 연평균 1조 2,43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을 규정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국비 연평균 1,38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일반·지방행정 분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9,619억원(15.4%) 지출 증가 예상
 -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국비 연평균 9,500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5] 지출 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국가지출

(단위: 억원, %)

지출 분야 (국가)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년)		
	연평균	합 계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2,694	13,471	4.3
과학기술	189	944	0.3
교육	446	2,231	0.7
교통 및 물류	47	235	0.1
국방	5,277	26,386	8.5
국토 및 지역개발	122	611	0.2
농림수산	1,936	9,679	3.1
문화 및 관광	352	1,760	0.6
보건	276	1,380	0.4
사회복지	23,871	119,354	3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120	85,598	27.4
일반·지방행정	9,619	48,094	15.4
통일·외교	29	145	0.05
통신	-	-	-
환경	438	2,192	0.7
예비비	-	-	-
합 계	62,416	312,080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8>

마.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지출 분야의 재정소요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8,034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에 따라 연평균 1조 6,788억원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평균 1조 6,362억원 등 연평균 7조 6,64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보건복지위원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 「아동수당법」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8,03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6,78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6,362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6]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건, 억원)

위원회	지출법률 건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국회운영위원회	1	198	988
법제사법위원회	2	29	144
정무위원회	11	717	3,586
기획재정위원회	-	-	-
교육위원회	12	544	2,7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189	944
외교통일위원회	1	29	145
국방위원회	8	5,277	26,386
행정안전위원회	12	16,362	81,8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352	1,760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2,012	10,06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	16,788	83,940
보건복지위원회	12	28,034	140,168
환경노동위원회	12	2,025	10,125
국토교통위원회	9	1,073	5,367
정보위원회	-	-	-
여성가족위원회	4	3,011	15,05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합 계	133	76,641	383,203

주 1. 지출 재정소요점검은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113건을 제외한 법률 133건 (212개 재정수반요인)의 추계금액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0464/9>

4.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가. 개요

- 2021년 가결 지출법률 중 2021년 및 2022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98건⁴¹⁾이며, 이들 법률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규모⁴²⁾는 2021년 2조 5,889억원, 2022년 5조 5,400억원으로 집계됨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 관련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 및 법률안 가결 시점과 예산안 편성시점 차이로 예산이 미편성 되었으나 예비비 등으로 집행된 경우도 포함

[표 27] 지출법률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예산반영액	25,889	55,400

주: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예산반영액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등 법률 가결을 전제로 2021년에 미리 사업비를 편성하여 2조 5,889억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사업비 등

41) 2022년 예산이 반영된 법률 98건에는 2021년 먼저 예산이 반영된 9건이 포함. 2021년 가결된 법률에 따라 2021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법률 가결을 전제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임

42) 2021년에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예산 반영 건에는 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법률 제·개정으로 추가 혹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건만을 포함. 다만, 법률 가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법률의 근거가 사후에 마련된 경우는 법률 제·개정의 영향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음

- 2022년 예산반영액은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5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등 5조 5,400억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아동수당법」 개정,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무지출 사업비 등

나. 총지출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 지출법률 관련 사업비가 2021년 및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규모를 총지출⁴³⁾의 전년 대비 증가액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남
 - 2021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조 2,51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5.0%인 2조 5,889억원이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효과
 - 2022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조 9,45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37.1%인 5조 5,400억원이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효과

[표 28]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단위: 억원, %)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액(a)	522,511	149,451
예산반영액(b)	25,889	55,400
비중(b/a)	5.0	37.1

- 주 1.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예산반영액 규모를 총지출 규모로 산정할 경우, 2021년 2조 5,492억원, 2022년 5조 4,729억원(신용보증기금 반영규모를 제외)으로 예산반영액은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의 4.9%, 36.6%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3) 연도별 총지출(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의미)이며, 추가경정예산 기준

다. 위원회별·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 현황을 위원회별 및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라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5개 부처) 소관 예산에 2조 5,889억원 반영
 - (위원회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조 5,176억원(97.2%)⁴⁴⁾, 정무위원회 소관 398억원(1.5%)⁴⁵⁾,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84억원(1.1%)⁴⁶⁾ 순
 - (부처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4,325억원(94.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851억원(3.3%), 금융위원회 소관 398억원(1.5%) 순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라 2022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등 16개 위원회(31개 부처) 소관 예산에 5조 5,400억원 반영
 - (위원회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조 5,256억원(45.6%)⁴⁷⁾,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조 2,889억원(23.3%)⁴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439억원(17.0%)⁴⁹⁾ 순
 - (부처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2,645(40.9%), 보건복지부 소관 1조 1,669억원(21.1%), 행정안전부 소관 9,370억원(16.9%) 등

4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장, 2021.7.1.의결, 2021.10.8.시행) 개정 등

45) 「신용보증기금법」(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021.12.9.의결, 2022.4.1.시행) 개정 등

46) 「임금채권보장법」(위원장, 2021.3.24.의결, 2021.10.14.시행) 개정 등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장, 2021.7.1.의결, 2021.10.8.시행) 개정 등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2021.12.2.의결, 2022.3.22.시행) 개정 등

4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위원장, 2021.11.11.의결, 2022.1.1.시행) 개정 등

[표 29] 위원회별·부처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위원회명	부처명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예산반영액	비중	예산반영액	비중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	-	10	0.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	6	0.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	3	0.0
	금융위원회	398	1.5	596	1.1
	국민권익위원회	-	-	3	0.0
	국가보훈처	-	-	69	0.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	184	0.3
교육위원회	교육부	-	-	79	0.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27	0.2
	원자력안전위원회	-	-	8	0.0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	-	29	0.1
국방위원회	국방부	-	-	2,410	4.4
	병무청	-	-	314	0.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	9,370	1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37	0.1
	인사혁신처	32	0.1	3	0.0
	경찰청	-	-	30	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	1,227	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	276	0.5
	해양수산부	-	-	12	0.0
	농촌진흥청	-	-	-	0.0
	산림청	-	-	1,449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851	3.3	2,611	4.7
	중소벤처기업부	24,325	94.0	22,645	40.9
	특허청	-	-	0.4	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	11,669	21.1
	식품의약품안전처	-	-	19	0.0
	질병관리청	-	-	1,200	2.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	17	0.0
	고용노동부	284	1.1	875	1.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	51	0.1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	72	0.1
합 계		25,889	100.0	55,400	100.0

주 1.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신규 혹은 추가로 사업비에 반영된 규모를 의미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사업비는 2021년·2022년 모두 의무지출 관련 사업비가 재량지출 관련 사업비보다 높게 나타남
 - 2021년 의무지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2조 4,547억원, 2022년 3조 809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반면, 재량지출의 경우 2021년 1,342억원, 2022년 2조 4,592억원이 반영됨
 - 2021년 예산에는 의무지출 법률 관련 사업비가 94.8%, 2022년 예산에는 의무지출 관련 사업비가 전체의 55.6%, 재량지출 관련 사업비가 전체의 44.4%로 집계

[표 30] 총지출 및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지출유형	2021년		2022년	
	예산반영액	비중	예산반영액	비중
의무지출	24,547	94.8	30,809	55.6
재량지출	1,342	5.2	24,592	44.4
합 계	25,889	100.0	55,400	100.0

주 1.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기준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무지출 관련 법률 개정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보상이 제도화됨에 따라, 법 시행일(2021.10.8.)에 맞추어 2021년 2조 4,263억원, 2022년 2조 2,436억원이 반영됨

[표 31] 의무지출 관련 법률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법률명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사업명 (시행일)	2021년 예산반영액	2022년 예산반영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2021.10.8.)	24,263	22,436
「아동수당법」 (2021.12.2.)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2022.4.1.)	-	3,856
	2세미만 영아수당 지급	영아수당 지원 (2022.1.1.)	-	3,7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3.24.)	학생연구원 보험적용	산재보험급여 (2022.1.1.)	-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4.29.)	직장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2021.10.8.)	-	11
「임금채권보장법」 (2021.3.24.)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채당지급금 (2021.10.14.)	284	722
합 계			24,547	30,809

주: 사업명은 세부사업 기준

자료: 소관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재량지출은 2021년 1,342 억원, 2022년 2조 4,592억원

-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예산에 562억원 편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에 지원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예산에 7,500억원 편성

마. 지출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사업의 2021년·2022년 16대 분야 별 예산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1년 예산에 반영된 2조 5,889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조 5,573

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98.8%),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284억원(1.1%), 일반·지방행정분야 32억원(0.1%) 순

- 2022년 예산에 반영된 5조 5,400억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조 5,85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46.7%),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2,686억원(22.9%), 일반·지방행정분야 9,425억원(17.0%) 순

[표 32] 지출법률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지출 분야	예산반영 현황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	-	36	0.1
과학기술	-	-	135	0.2
교육	-	-	79	0.1
교통 및 물류	-	-	48	0.1
국방	-	-	2,724	4.9
국토 및 지역개발	-	-	9	0.0
농림수산	-	-	1,731	3.1
문화 및 관광	-	-	1,227	2.2
보건	-	-	1,219	2.2
사회복지	284	1.1	12,686	2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573	98.8	25,852	46.7
일반·지방행정	32	0.1	9,425	17.0
통일·외교	-	-	29	0.1
통신	-	-	-	-
환경	-	-	201	0.4
예비비	-	-	-	-
합 계	25,889	100.0	55,4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회계별·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사업의 2021년·2022년 회계별·기금별 반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021년 예산에 745억원, 2022년 예산에 2조 5,772억원이 반영되어 각각 전체 예산반영액의 2.9%, 46.5%에 해당

- (특별회계) 2022년 예산에 1,850억원이 반영되어 전체 예산반영액의 3.3%에 해당
- (기금) 2021년 4개 기금에 2조 5,144억원, 2022년 14개 기금에 2조 7,778억원 등 2021년과 2022년 전체 예산반영액의 97.1%와 50.1%가 기금 관련 법률의 예산반영액

[표 33] 회계별·기금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1년 예산반영액 (비중)	2022년 예산반영액 (비중)
일반회계	-	745 (2.9)	25,772 (46.5)
특별회계(6개)	교통시설특별회계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68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0.4
	환경개선특별회계	-	15
	특별회계 합계	-	1,850 (3.3)
기금(14개)	국민체육진흥기금	-	645
	관광진흥개발기금	-	575
	근로복지진흥기금	-	64
	기후대응기금	-	1,746
	농지관리기금	-	43
	남북협력기금	-	29
	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	-	6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4,263	22,440
	신용보증기금	398	596
	원자력기금	-	8
	임금채권보장기금	284	72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40
	전력산업기반기금	200	792
	청소년육성기금	-	15
	기금 합계	25,144 (97.1)	27,778 (50.1)
합 계		25,889 (100.0)	55,4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2018~2021년

가. 개요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2021년과 2022년 예산 반영 현황조사⁵⁰⁾를 실시한 결과, 미반영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예산반영여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행정부가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나.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사업부처가 응답한 예산미반영 사유는 다음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사업계획 미수립, 사업계획 수립단계, 법령 등 기준 정비단계,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법률 등 시행일 미도래,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

(1)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 각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
 - 통일부 소관 「통일교육 지원법」(위원장, 2018.2.20.의결, 2018.9.14.시행),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8.12.7.의결, 2019.7.9.시행), 개정 등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50) 2021년 가결 지출법률 소관 부처 의견조회 결과(조사시점: 2021년 1~3월)

[표 34]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8년	2018.2.20.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 (위원장, 2018.9.1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통일교육 실시	교육실시 의무가 교육 대상기관에 있어, 교육 운영 예산 미반영
	2018.12.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7.9.)	훼손된 산림 복원 실태조사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원지 유지· 관리	
2019년	2019.10.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위원장, 2019.12.3.)	우수관광특구 지원	
	2019.10.3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원장, 2020.5.27.)	문화재 진흥 정책 추진 및 지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실시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소관부처가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0.4.1.)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인력 수급 동향조사	
2020년	2020.5.20.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21.6.10.)	이주대책과 정주대책 수립 및 시행	소관부처가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종합계획 수립중
	2020.1.9.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2.19.)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지구 내 주민 지원사업 실시	소관부처가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2020.3.6.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3.25.)	임업인의 날 지정 및 행사 실시	
	2020.5.20. (산림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21.6.10.)	도시숲 등 조성·관리 지원	
	2020.3.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위원장, 2021.4.1.)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0.5.20. (환경부)	「자연공원법」 (위원장, 2020.12.10.)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및 사업 실시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12.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2021.6.2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사업 지원	
2021년	2021.2.26. (대법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장, 2021.3.16.)	피해아동 보조인 선임 관련한 경우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화	
	2021.2.26.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위원장, 2021.6.24.)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2021.6.29.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2022.1.21.)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 회 지원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2021.12.9. (해양수산부)	「도선법」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2022.7.3.)	업무 위탁비	
	2021.3.24. (산림청)	「산림보호법」 (위원장, 2021.10.14.)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도입 시 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2021.3.24.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021.5.21.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2021.6.2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22.1.2.)	인재원 부설 연구소 설립 · 운영	소관부처가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2021.3.24.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원장, 2021.10.13.)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2021.4.2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위원장, 2021.5.18.)	청년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사업계획 미수립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로서 현재 사업예산 수요가 없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 해양수산부 소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018.12.27.의결, 2020.1.16.시행), 환경부 소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8.5.28.의결, 2019.6.13.시행) 제정 등은 사업예산 수요 없음
 - 질병관리청 소관 「구강보건법」(위원장, 2019.4.5.의결, 2019.4.23.시행)은 사업여부 검토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19.12.27.의결, 2020.4.1.시행) 개정 등은 사업계획 미수립

[표 35]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미수립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8년	2018.12.27. (해양수산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020.1.16.)	갯벌실태조사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보상 갯벌 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어업권 매수 또는 토지교환	갯벌실태조사 등 여건 조성 및 지자체(사업계획 수립 등) 수요 발생시 시범사업 실시 추진
	2018.5.28. (환경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9.6.13.)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없어 소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2019년	2019.4.5.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10.24.)	군사시설 실태 조사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건축물 전수조사 등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예산 반영 계획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0.4.1.)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교육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보다 공모로 선정된 기관을 통해 재직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9년	2019.10.31.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확대	법률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따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2019.4.5. (질병관리청)	「구강보건법」 (위원장, 2019.4.23.)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법 개정으로 사업 필요성이 있으나 부처간 업무 이관(20.9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 사업 실시 위한 유사사업 검토, 관련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등이 필요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연
	2019.4.5.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위원장, 2020.5.1.)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법 개정으로 사업이 필요하나, 당장 시행계획이 없음
	2019.10.3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5.1.)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 발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19.10.3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20.2.27.)	자동차정비전문인력 관리 시책 수립 및 관련 단체 지원	
2020년	2020.3.5.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장, 2020.10.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최대 기간 연장	대상아동 처분 건수가 예산반영 할 수준만큼 나타나지 않아, 향후 처분 건수 추이를 더 지켜보고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
	2020.4.29. (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위원장, 2020.8.20.)	주한미군 한인근로자 지원	2021년 3월 11차 방위비 협상 타결로 협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무급휴직 시행 계획이 없는바 2022년도 예산 반영 불필요
	2020.12.1.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원장, 2021.6.23.)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 없음 ¹⁾
	2020.1.9.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2.19.)	해양치유지구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 부담금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법 개정으로 사업이 필요하나, 당장 시행계획이 없음
	2020.4.29.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21.5.20.)	후계농어업인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에의 반영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중이며,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 확보 추진 예정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2020.1.9.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21.2.19.)	석재산업 관련 경비 지원 석재산업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	예산소요 검토 필요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예정
	2020.3.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위원장, 2021.4.1.)	전기재해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조치명령 및 손실보상	전기재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전기설비 및 전기재해 우려 등 관련 사례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예산 미편성
	2020.12.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실태조사 매년 시행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완화	예산소요 없음
	2020.5.20.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021.6.10.)	거주주민 이주대책 수립·시행,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 지역 주민사업 지원 등	공공폐자원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지연에 따라(재공모 응모지역 없음) 입지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정
	2020.12.9.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021.4.6.)	예정지역 입주 국제기구 운영비용 지원	국제기구 유치 추진중으로, 국제기구 추가 유치 및 임차료, 운영비 지원 시점 미정
	2020.9.24.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4.21.)	개발계획 수립 시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 미확정
	2020.9.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4.2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용자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예산 요청예정
2021년	2021.3.24. (법무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스토킹행위 제지 및 접근 금지, 피해자 절차 안내	2023년 예산 편성 예정
	2021.5.21. (교육부)	「평생교육법」 (위원장, 2021.12.9.)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법개정으로 발급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직접적인 증액분은 없음
	2021.8.31.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위원장, 2022.3.25.)	원격교육통계조사 실시	정책연구 후 관련 계획 수립 예정
	2021.5.21. (교육부)	「평생교육법」 (위원장, 2021.12.9.)	평생교육 상담 및 지원활동	사업계획 미수립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3.24.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창업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법 개정으로 사업이 필 요하나 당장 시행계획이 없음
	2021.3.24.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위원장, 2022.4.21.)	경찰공무원 심신건강연구 및 건강검진 실시	일부 이미 수행되고 있으 나 향후 확대여부 미정
	2021.4.29.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1.11.19.)	박물관, 문학관 등의 자료양여	사업계획 미수립
	2021.4.2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21.6.23.)	지역문화예술인 온라인 문 화예술활동 지원	
	2021.6.2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8.)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 련 주체 지원 등	
	2021.4.29.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4.5.19.)	신고포상금 제도 및 야생동물검역관 배치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21.10.14.)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업범위 확대	재난 예측 등 곤란하여 지원계획 미수립, 재난 상황발생 시 포상 추진 예정
	2021.4.29. (고용노동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1.19.)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 체 등에 포상	
	2021.7.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2.2.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게시 설 설치 운영 지원	사업계획 없음

주: 1) 행정안전부는 단순 정의규정 개정으로 사업예산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사업계획 수립단계

-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 중인 사례
- 해양수산부 소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018.12.27.의결, 2020.1.16.시행),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8.12.7.의결, 2019.7.9.시행) 개정 등은 사업계획 수립 중
 -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10.31.의결, 2020.6.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8.2.의결, 2020.8.21.시행) 개정 건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실시 중

[표 36]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수립단계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8년	2018.12.27. (해양수산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020.1.16.)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지원 지정 청정갯벌 생산 생물자원 우선구매 재정지원 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갯벌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계획 수립 중
	2018.12.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7.9.)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및 비용 지원 산림복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2019년	2019.10.31.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4.)	전통재료 인증	사업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실시
	2019.8.2.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8.21.)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화훼 관련 지식 및 기술 보급·전수 교육훈련 실시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9년			화훼 생산기반시설 지원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2019년	2019.8.2.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8.28.)	양봉산업 현황 실태조사,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양봉산업 진흥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단계로 예산 규모 및 필요성 검토 중
	2019.4.5.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20.5.1.)	드론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정책 마련 드론산업 우수사업자 지정	지원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후 예산편성 계획
2020년	2020.12.9.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2.1.13.)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
	2020.12.1.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원장, 2021.6.23.)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통계 추가	
	2020.9.24.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7.6.)	감염병환자등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 포함 및 정보시스템 활용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에 따른 내역사업은 연차별 구축 계획에 따른 2024년도에 실시예정
	2020.5.20.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12.10.)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실시	2022년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2020.11.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위원장, 2021.6.9.)	징계이력 등 세부인적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반영 예정
	2020.12.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1.6.23.)	전담기관 지정	2023년 예산편성 시 추가 지원 여부 검토예정
	2020.8.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위원장, 2021.2.19.)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CCTV를 설치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주요지점" 등에 대한 범위, 방법, 설치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선행 필요
	2020.4.29.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21.5.20.)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반영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중
	2020.1.9.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2.19.)	해양치유자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실시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연안 어촌지역 주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 우선 제공	
			해양치유관리단 설립 및 지정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완 료(2021.7.)되었고, 해 양치유관리단이 수행하 기에 적절한 사업의 경 우 지원예정
			지역교육센터 지정 및 지 원, 국내외 교류 등 협력 활동 지원 등	예산 확보 추진 중
	2020.12.1. (해양수산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23.)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업계획 수립하여 '23 년도부터 지원 예정
	2020.9.24.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1.1.21.)	항공우주산업 실태조사	연구기획 완료 단계(실태 조사 예산 반영 전 통계 조사 등에 대한 연구기획 및 업계협의 진행 중)
	2020.12.9. (국토교통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22.1.6.)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사업계획 수립 중 (시범사업 추진 예정)
2021년	2021.8.31.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위원장, 2022.3.25.)	원격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민간 및 국제협력 지원 교원의 원격교육 지원 대학 등 원격연구 지원 대학 등 원격교육 인프라	사업계획 수립단계
	2021.11.11. (행정안전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 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2.6.8.)	치유센터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필요경비 출연 또 는 보조	치유센터 2023년 말까 지 건립예정
	2021.5.2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법」 (위원장, 2022.6.16.)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중
	2021.6.2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 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8.)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 관 지정	사업계획 수립 중
	2021.6.2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에 관한 법률」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22.4.28.)	실태조사 실시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사업계획 수립 중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원장, 2024.7.21.)	점자 등 음성·수어영상변 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교 육·홍보	사업계획 수립 중(점자 코드 표시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 후 교육· 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에 반영할 예정)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12.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위원장, 2022.7.1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 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 지원	사업계획 수립 중
	2021.5.21.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1.12.16.)	권한의 위임·위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 업계획을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 중
			녹색혁신산업 지정 및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 설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 설 지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2021.11.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원장, 2021.1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 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 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 단 등에 위탁	사업계획 수립 중 2023년 예산 요구 예정
	2021.3.24.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원장, 2021.7.14.)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년 이후 예산 요구 예정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법령 등 기준 정비단계

-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거나 사업기준 등을 마련 중인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0.12.2.의결, 2021.6.23.시행) 개정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 미수립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소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20.12.9.의결, 2021.1.5.시행)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중

[표 37]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법령 등 기준 정비단계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2020.12.2.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1.6.23.)	만화진흥위원회 운영	구체적인 세부운영 기준 마련 후 예산 반영 필요
	2020.12.9.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21.1.5.)	대중교통수단에 도선 추가	관련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정비 중
2021년	2021.12.2.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원장, 2021.12.28.)	중복장애학생 배치 학급 설치 기준 조정	하위법령 정비 중
	2021.2.26.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25.)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2021.8.31. (국방부)	「군사법원법」 (위원장, 2022.7.1.)	군사법원 편제개편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 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2021.12.9.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2022.4.12.)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지연이자 지급	
	2021.12.9.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법」 (위원장, 2022.4.5.)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험료 전액 지원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 금 차액 지원	법령 정비 후 사업 실시 예정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12.9.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정부, 2022.7.5.)	중점관리대상업체 평가 및 포상	하위 법령 정비 후 사업 실시 예정
	2021.12.2. (질병관리청)	「검역법」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022.6.22.)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 국장 등에 해외감염병신고 센터설치	하위법령 정비 중
	2021.4.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원장, 2022.1.1.)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재근 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	
	2021.6.29.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022.1.28.)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21.6.29.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2022.1.21.)	기준제정기관 설립 및 운 영 비용지원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예산요구서⁵¹⁾ 제출 후 법률안 가결

□ 예산요구서 제출 시기와 법률안 가결 시기상의 차이로 예산이 미편성된 사례

- 해양수산부 소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장, 2020.12.1. 의결, 2021.12.23.시행), 행정안전부 소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정부, 2021.9.28.의결, 2022.4.20.시행) 제·개정은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51)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38]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2020.12.1. (해양수산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23.)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게 자금 지원 등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2021.12.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원장, 2022.7.1.)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 지원조직 설치	
	2021.7.23. (대법원)	「형사소송법」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021.12.18.)	원격영상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1.7.23. (대법원)	「민사소송법」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021.11.18.)	변론기일 등 원격영상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21.11.11.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6.8.)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업종별 거래기준 제시·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등	
	2021.12.9. (공정거래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위원장, 2022.7.5.)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등	
2021년	2021.11.1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6.8.)	신고자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등 구조금 지급	
	2021.12.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7.5.)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소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소송으로 확대	
	2021.12.2.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28.)	전환대출 범위 확대	
	2021.8.31.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위원장, 2022.3.25.)	학습지원 교원 연수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수립 학습지원 필요수업 보조인력 배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2021.9.28.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부, 2022.4.20.)	피해자 치유사업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2.7.1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7.2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 복지법」 (위원장, 2022.8.11.)	체육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 등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2021.8.3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22.9.25.)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	
	2021.12.3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원장, 2022.7.19.)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 랫폼 구축·운영	
	2021.12.31.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 한 특별법」 (위원장, 2022.7.19.)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 사문화권 추가	
	2021.12.3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2.7.19.)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2021.12.31.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7.19.)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지 정·운영 및 지표조사 실시	
	2021.11.1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위원장, 2022.6.1.)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2021.1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원장, 2022.1.4.)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2021.1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위원장, 2022.6.22.)	자립지원 실태조사 3년마 다 실시	
	2021.12.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2022.6.2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2021.12.2.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22.)	장기등 기증자와 공여자 간 교류활동 지원 장기 등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정책 마련 및 추진,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사업	
	2021.12.2.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법」 (위원장, 2022.6.2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 정·운영	
	2021.12.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영효의원 대표발의, 2022.6.22.)	발달장애인 차별, 편견 및 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대 한 홍보영상 제작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원장, 2021.7.20.)	매년 11월 18일 약의 날	예산요구서 제출 후 법률안 가결
	2021.2.26.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9.)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 구 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음	
	2021.1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원장, 2022.1.11.)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급 여 지급	
	2021.6.29.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022.7.21.)	지도 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	
	2021.12.31.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위원장, 2022.7.1.)	조합 등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 비용 보조 또는 용자	
	2021.11.1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동 촉진법」 (위원장, 2022.6.8.)	여성경제활동백서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법률 등 시행일 미도래

□ 예산안 편성 시 법률 제·개정 사항의 법률 시행일 및 해당 사업의 시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례

- 시행일 미도래 관련 사업들은 주로 2021년 가결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건들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10.31.의결, 2020.6.4.시행),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019.8.2.의결, 2020.8.28.시행), 개정 건의 경우 해당 사업 실시 시기, 법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39]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법률 등 시행일 미도래

의결 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9년	2019.10.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4.)	5년 주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적절성 조사	조사 실시주기 5년으 로, 기금 예산 여건 등 고려하여 미반영
	2019.8.2.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020.8.28.시행)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하여 면허의 만료 전 심사 ·평가 실시	면허심사평가제도는 2025년 3월 시행 예정
2020년	2020.12.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 한 특별법」 (위원장, 2021.6.2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법 개정예 따라 사업기 간이 2023년부터 202 6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2023년 예산 편성 예정
	2020.3.6. (환경부)	「수도법」 (위원장, 2021.4.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실태조사 시기 도래 시 편성예정
2021년	2021.12.9.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30.)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 무화 등	시행일 미도래
	2021.12.2. (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 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6.29.)	초·중·고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 지·관리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 및 조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 준 감염예방 관련 사항 포함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예 방 기법 우선 적용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 포함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 등 상담·심리치료 지원	
	2021.12.2.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29.)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 련기관 등에 대해 학자금 지원	
	2021.2.26.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9.24.)	선발실적 우수 지방대학 지원	
	2021.7.1.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7.21.)	교육연구센터 지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등 설치· 운영	

의결 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8.31.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위원장, 2022.3.25.)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시행일 미도래
	2021.6.29.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3.7.21.)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202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위원장, 2023.1.5.)	기술개발 촉진 사업 추진,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2021.5.21. (소방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2022.6.9.)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화재조사전담부서 및 화재합동조사단 설치 등	
	2021.11.11.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1.)	화재안전영향평가, 손실보상 등	
	2021.12.9.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위원장, 2024.1.5.)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 등	
	2021.12.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위원장, 2023.7.5.)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2021.12.5.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위원장, 2023.1.11.)	폐어구·유실어구 등 실태조사	
	2021.6.25.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3.1.1.)	수산부산물 발생량, 처리실적 통계조사 실시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시책 추진	
	2021.12.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24.1.5.)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관리·운영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2021.3.2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2022.4.14.)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 진흥	
	2021.1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위원장, 2022.3.30.)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주기 단축(5년→3년)	
	2021.8.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3.25.)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5년주기 수립	

의결 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12.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원장, 2023.6.22.)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시행일 미도래
	2021.12.2.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위원장, 2023.6.22.)	헌혈자의 날 지정 및 기념 행사 실시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 시행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 도모	
	2021.12.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3.1.1.)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 치·운영	
	2021.12.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위원장, 2023.12.23.)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 지표 작성·보급	
	2021.8.31.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원장, 2023.9.25.)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 전 설치	
	2021.12.2.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22.12.2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평가	
	2021.2.2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위원장, 2021.3.23.)	실태조사 주기 단축 (2023년 시행 예정)	
	2021.12.31.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원장, 2023.1.19.)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 행, 교통약자 택시아용 비 용 지원	시행일 미도래 (2023.7월 시행)
			교통수단에 ‘궤도’ 추가	시행일 미도래 (2024.1월 시행)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지원	시행일 미도래 (2023.7월 시행)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행일 미도래 (2023.7월 시행)
	2021.3.24.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3.1.1.)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 의회,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등	시행일 미도래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 현행 사업비 내에서 법률 제·개정 관련 재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나, 추진 중인 사례

-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8.12.27.의결, 2019.1.15.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법」(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9.20.의결, 2019.4.17.시행) 개정 등은 기존 사업비 내에서 처리 가능

[표 40]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8년	2018.12.2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1.15.)	보호신청 기간 3년 확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18.9.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9.4.17.)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실시	
2019년	2019.10.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위원장, 2019.12.3.)	관광특구 평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소재부품기술개발 등)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20.4.1.)	특화단지 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화단지 육성 시책 추진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2019.10.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4.)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보급	
2020년	2020.9.24.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장, 2021.1.21.)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병과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법률 개정 이후 동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집행인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20.4.29. (국가보훈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2020.11.27.)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2년 예산 194억원)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2020.12.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7.6.)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2년 예산 42억원)
	2020.11.19.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12.8.)	협의회 위원 및 위촉위원 증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0.11.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2020.12.8.)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보호대상자로 결정	
	2020.12.1.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원장, 2021.6.23.)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백서 작성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추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 (기본경비 또는 중대본 운영경비 등)
	2020.1.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원장, 2020.5.5.)	폐업 지원금 지급	예비비로 운영할 필요
	2020.1.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위원장, 2020.2.11.)	빈집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른 예산 지원은 기존 사업 내에서 추진할 예정
	2020.4.2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정부, 2020.11.27.)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
	2020.1.9. (해양수산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2.1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 (기본계획 수립 20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2021.2.19.)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이용 식단 및 조리개발·보급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며, 2020~2021년은 코로나상황으로 미실시 (수산물해외시장개척 2022년 0.7억원)
	2020.4.29.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21.5.20.)	후계농어업인단체 조직 및 활동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 (어업인교육훈련 등 2022년 4억원)
	2020.12.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국내복귀기업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 시 지원 국내복귀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과 거래처 확보 지원 국내복귀기업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투자유치기반조성 등 2022년 570억원)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국내복귀기업 자동화 생산 설비투자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비용 지원 동반복귀기업 지원 범위 확대 및 요건 변경	
	2020.12.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위원장, 2021.6.30.)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 제 출입 규정 및 수시 수립 근 거 마련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0.1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위원장, 2021.1.1.)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치료 지원	
	2020.5.20.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10.)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설치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자원순환정책관실 기본 경비 2022년 2.5억원)
	2020.12.9. (환경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6.)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환경교육강화 2022년 248억원)
	2020.12.9.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1.7.6.)	요양급여 지급 시 석면질 병 진단일에 소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 례비 지급신청 기한 15년 연장 석면피해 피인정자 중대한 후유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결과)
	2020.3.6. (환경부)	「수도법」 (위원장, 2021.4.1.)	상수도관망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예산 지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 관의 세척 등 포함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정책사항으로 예산 미편성
2021년	2021.3.24.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장, 2021.4.20.)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사립학교법」 및 「근로 기준법」 추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1.12.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4.)	보상금 지급대상 연령 상향	
	2021.12.9.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2.1.4.)	부모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수령연령을 만 24세로 상향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3.24.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보훈보상대상자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및 의료기관 진료 위탁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제대군인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및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시책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0.2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난 발생 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2021.1.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21.7.27.)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021.8.31.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위원장, 2022.3.1.)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2021.2.26. (교육부)	「고등교육법」 (위원장, 2022.3.24.)	재정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2021.8.31. (교육부)	「학교보건법」 (위원장, 2022.3.25.)	지역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5.21. (교육부)	「평생교육법」 (위원장, 2021.12.9.)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1.8.31.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위원장, 2022.3.25.)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2021.8.31. (국방부)	「군사법원법」 (위원장, 2022.7.1.)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위원장, 2022.4.19.)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위원장, 2022.1.1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위원장, 2022.1.18.)	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복지지원 추가	
	2021.7.2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위원장, 2022.2.11.)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2021.12.3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2.7.19.)	문화재환수 공로자 대한 시상 등 예우	
	2021.12.3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원장, 2022.7.19.)	문화재환수 공로자에 대한 시상 등 예우	
	2021.3.2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위원장, 2021.7.2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2021.1.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021.4.27.)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	
	2021.3.2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4.20.)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2021.3.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위원장, 2021.10.2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대상에 「의료법」 제33조제 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 인,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 인 포함	
	2021.6.2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에 관한 법률」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22.4.28.)	자율상권조합 지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생 구역에 대한 지원 등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1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위원장, 2022.6.29.)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등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2021.7.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기간 을 완화	
	2021.1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위원장, 2022.6.22.)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 동 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를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 비 등 실비 지급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아동 학대 예방교육 실시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추 가연장	
	2021.12.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원장, 2022.4.1.)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등의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	
	2021.12.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위원장, 2022.6.22.)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 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 급을 연기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국민연금 급여지급)
	2021.12.2.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 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22.3.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의 지정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2021.5.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위원장, 2021.5.21.)	연금보험료 체납분 개별 납부 기한 제한 없이 확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 탁사업비)
	2021.5.2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8.)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치료비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7.24.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2.1.1.)	보호대상장애아동 가정 위탁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정위탁운영지원)
	2021.2.2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9.24.)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 설치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 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21.6.2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22.1.2.)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 양등급 등에 따라 다음 연 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 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금액을 정하여 고시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 업운영)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위원장, 2022.1.21.)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의료기기위원회)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원장, 2022.1.2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앙약사심의 등 회의 수당)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 별법」 (정부, 2021.7.27.)	품질인증 기준 및 표시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식품 관리)
	2021.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21.7.27.)	식품안전의 날과 관련한 사 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2021.4.29. (환경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에 관한 국민신탁법」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22.5.19.)	재산 보전 및 운용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자연보전단체: 2022년 2억원)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

□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기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

-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문진국의원 대표발의, 2018.7.26.의결, 2019.6.15.시행), 환경부 소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8.5.28.의결, 2019.6.13.시행) 제·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18.7.26.의결, 2018.8.14.시행) 개정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

[표 41]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18년	2018.5.28. (환경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9.6.13.)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게 손실 보상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사업실시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시행사무
	2018.7.26. (국토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18.8.14.)	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
	2018.7.26.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2019.6.15.)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자금의 보조·용자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0년	2020.9.24.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장, 2021.1.2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 사무
	2020.3.6.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25.)	학교복합시설 설치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 보장 대책 마련	교육청 및 타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담사항 (총괄예산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리)
	2020.12.9.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위원장, 2021.5.13.)	자전거의 보도 주차 특례 마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청 사무
	2020.11.19. (소방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정부, 2021.6.9.)	의용소방대원이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	
	2020.8.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위원장, 2021.2.19.)	선수·체육지도자 임시보 호시설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소관 체 육회 등) 사무
	2020.4.29.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21.5.20.)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 과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0.1.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위원장, 2020.8.12.)	특정 빈집 철거 시 보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 공기관 사무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 매입	
			실태조사 출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	
	2020.1.9.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2.19.)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 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전문기관에 조성계획 타당 성 조사 신청	
	2020.3.6.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2020.3.31.)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농업 잔재물 관련 조치 시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 공기관 사무
	2020.12.9. (환경부)	「환경보건법」 (위원장, 2021.7.6.)	시·도지사 소속 지역환경 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하수도법」 (위원장, 2022.1.6.)	토지 지하부분 사용 보상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 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2020.5.20.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0.12.10.)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지원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0년	2020.5.20.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21.1.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장 치 의무화 시 비용 지원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 전장치 예산은 국토교 통부가 아닌 각 소관부 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자 체 반영할 사항
	2020.5.2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0.12.10.)	초경량비행장치 보유한 기 관의 보험 또는 공제에 의 무 가입	드론 보험이력 및 사고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22.12)이후 의무가입 여부 확인 가능
	2020.11.19.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3.9.)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1년	2021.2.26.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 영·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25.)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행정 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청 및 타부처(국토 부, 문체부, 여가부, 중 기부, 농식품부) 부담 사항으로 교육부에서는 파악 곤란
	2021.8.31.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2.3.25.)	대학 등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추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수 익사업으로 사업 수행 예정
	2021.12.2. (교육부)	「학교보건법」 (위원장, 2022.6.29.)	공기 질 연 2회 이상 점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연 2회 이상 점검	지방교육단체 사무
	2021.12.2.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위원장, 2021.12.28.)	중복장애학생 등 맞춤형 치료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 원학교 지원 의무화	
			병원학교 담당교사 배치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의 무화	
	2021.12.2. (교육부)	「학교급식법」 (위원장, 2022.6.29.)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	
	2021.8.31.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위원장, 2022.3.1.)	고교학점제 운영	
	2021.8.31. (교육부)	「교육기본법」 (위원장, 2021.9.24.)	학급당 적정학생 수 실현 시책 수립·실시	
	2021.8.31. (교육부)	「사립학교법」 (위원장, 2022.3.25.)	시·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 회 설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2021.8.31.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위원장, 2022.3.25.)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8.31.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2.3.25.)	간병료 및 보호자 등 직접 간병에 소요 부대경비 지급 등	지방교육단체 사무
	2021.2.26.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1.9.24.)	노후화·훼손 시설·설비·교구 보수·교체비용 지원	
	2021.5.21. (교육부)	「학교보건법」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2021.12.9.)	보건교사 배치규정 강화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2021.3.24.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위원장, 2022.7.19.)	미술작품 관리실태 정기점검	
	2021.12.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위원장, 2022.6.22.)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지방이양 사업
	2021.7.2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위원장, 2021.8.17.)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실시	지역 부모교육 운영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사항으로 부처 예산 미반영
	2021.8.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3.25.)	시·도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1.12.2.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2.12.22.)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 등 추모 및 예우사업 실시	
	2021.2.2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9.24.)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2021.2.26.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1.9.2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 가능	
	2021.2.26.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22.8.18.)	시·군·구 인구가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 추가 설치	
	2021.4.29.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21.5.18.)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편의성을 높인 시설개선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2021년	2021.9.28.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위원장, 2022.7.12.)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범위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 사무
	2021.12.9.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2.7.12.)	보행자우선도로 내 안전표 지 등의 설치	
	2021.3.24.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원장, 2022.4.21.)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2021.6.29. (행정안전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022.1.21.)	3·15의거 기념사업 추진 비용 지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업 추진 예정
	2021.12.9.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위원장, 2022.7.12.)	보행자우선도로 내 시속 20킬로미터 제한	지방교육단체 사무
	2021.3.24.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 2021.7.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운영 담당
	2021.6.29.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원장, 2022.1.28.)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사무
	2021.3.2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원장, 2022.4.14.)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도입	
	2021.2.26.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원장, 2021.9.24.)		
	2021.3.24.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2021.10.14.)	빈집 정비계획, 실태조사 실시	
	2021.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022.12.8.)	실행계획 수립된 기반시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	
	2021.2.26.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위원장, 2022.3.17.)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철거 및 가림막 비용 지원	

주: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2년 1~3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시사점

- 최근 4년간 가결된 지출법률의 예산 반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로 재량 지출 관련 법률들의 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의무지출 관련 제·개정 건의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한 경우, 예비비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집행
 - 재량지출 관련 제·개정 건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재정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므로 당해 소관부처의 사업우선순위, 재원확보 여부 등 여러 변수들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 결정
- 법률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은 대부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여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재량지출의 경우이므로, 향후 정책변화 및 사업여건에 따라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V. 결 론

1. 요약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3건 중 추계가 가능한 153건의 361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변동을 점검한 결과, 수입 분야에서는 21건 법률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6조 9,47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 분야에서는 133건의 법률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조 6,64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국가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9조 3,462억원 감소 예상,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990억원 증가 예상
 - 단,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국가수입은 5년간 연평균 5조 1,166억원 감소 예상, 지방세수입은 5년간 연평균 1조 8,305억원 감소 예상
 - 국가 지출은 연평균 6조 2,416억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1조 4,225억원 증가 예상
 - 의무지출은 연평균 3조 4,410억원(국비 2조 8,118억원, 지방비 6,293억원) 증가 예상
 - 재량지출은 연평균 4조 2,230억원(국비 3조 4,298억원, 지방비 7,932억원) 증가 예상
 - 지출분야별로는 향후 5년동안 사회복지분야에 연평균 2조 3,871억원(38.2%)으로 전체 국가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연평균 1조 7,120억원(27.4%), 일반·지방행정분야에 연평균 9,619억원(15.4%) 순
- (예산반영분석 결과) 2021년 가결된 수입법률 중 2022년 총수입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16건이며, 예산반영 규모는 2022년 6조 2,108억원 감소,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98건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예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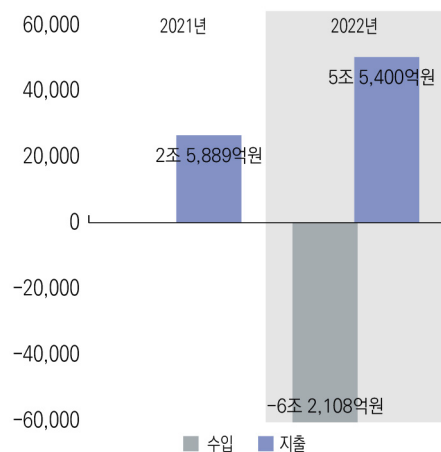
2021년 2조 5,889억원, 2022년 5조 5,4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5.0%(2021년), 37.1%(2022년) 수준

- 국세수입 관련 15건의 세법개정으로 6조 2,202억원 감소, 국세외수입 관련 1건의 개정으로 94억원 증가
- 지출법률 제·개정으로 2021년 예산반영액은 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경영상 손실보상을 지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한 사업비 등 2조 5,889억원, 2022년 예산반영액은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월 5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등 5조 5,400억원

[그림 8]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지출



[그림 9] 예산반영 현황



- 2021년 가결된 법률이 2021년과 2022년도 예산에 미친 영향을 중앙정부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조 2,51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5.0%인 2조 5,889억원이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효과
 - 2022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조 9,45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37.1%인 5조 5,400억원이 2021년 가결 지출법률의 효과

[표 42] 지출법률 예산반영 및 총지출변동 현황

(단위: 억원, %)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액(a)	522,511	149,451
예산반영액(b)	25,889	55,400
비중(b/a)	5.0	37.1

주 1.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예산반영액 규모를 총지출 규모로 산정할 경우, 2021년 2조 5,492억원, 2022년 5조 4,729억원(신용보증기금 반영규모를 제외)으로 예산반영액은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의 4.9%, 36.6%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시사점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을 판별하고, 해당 재정수반요인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법률의 규율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212개 요인에서 의무지출은 9개 요인으로 전체 추계 요인의 4.2%에 불과하나, 이에 따른 재정소요(연평균 3.4조원)는 전체 추가재정소요(연평균 7.7조원)의 44.9% 수준으로 추계됨

- 의무지출은 향후 법률의 제·개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가중된 주의 및 관리가 필요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212개 요인에서 재량지출은 203개 요인으로 전체 추계 요인의 95.8%이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연평균 4.2조원)는 전체 추가재정소요(연평균 7.7조원)의 55.1% 수준으로 추계됨

- 재량지출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행정부가 사업계획 수립, 하위 법령정비,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재정반영 여부가 결정

□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입법활동에 따른 재정부담을 추계하고 점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대체적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수입법률의 경우 비교적 확정된 미래의 지출사건 또는 수입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소요의 산출이 가능한 편임
 - 반면 재량지출이나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사업 등과 같이 지출사건 또는 수입사건의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는 개연성이 높은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정추계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2021년 가결된 지출법률 중 375개 재정수반요인은 대부분 재량지출 관련 건으로 지출사건의 불확정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나, 향후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도 필요
- 또한 현재 예산과정과 입법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제도상·운영상 한계 때문에 재정소요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예산과정 및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의회와 같이 위원회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며, 현행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기준선 전망을 바탕으로 입법의 재정영향을 평가하는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법률안 심의를 규범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임
 - 재정소요점검과 비용추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입법과정에 실효성 있게 반영됨으로써 입법 활동으로 인한 재정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회법」 제83조의2⁵²⁾는 예산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수반법률안 심사 시 예산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2)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부록] 2021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1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변동분이 연평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법률을 제시

〈수입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13612	「조세특례제한법」	-46,451	-232,261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2113615	「부가가치세법」	-44,770	-223,850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2113805	「지방세특례제한법」	-18,845	-94,224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적용기한 연장		
2112216	「종합부동산세법」	-918	-4,591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2113614	「소득세법」	-637	-3,187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13616	「관세법」	-424	-2,121
	-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2111122	「지방세법」	-250	-1,248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2113610	「주세법」	-184	-919
	-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기한 연장		
2113617	「국세기본법」	-148	-739
	-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037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22	-608
	- 체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가산율 및 연체금 상한액 인하		
2113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266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2112408	「개별소비세법」	-31	-157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2113229	「지방세법」	42,295	211,476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2113804	「지방세법」	791	3,956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21123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80	900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조정		
21088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2	512
	-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		
2113619	「국세징수법」	13	65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13640	「아동수당법」 -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영아수당 지급	20,684	103,420
211124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12,461	62,307
21132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9,500	47,500
2108993	「병역법」 -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5,121	25,605
21136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5,017	25,084
2112687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 등 확대	4,498	22,492
2109078	「청소년복지 지원법」 -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2,984	14,919
211379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1,980	9,900
21132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1,456	7,281
21045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 지정	1,380	6,898
21010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공단의 자본금 정부 출자	1,126	5,629
2113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 충족시 자산형성지원 대 상 지정	1,042	5,208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08891	「임금채권보장법」 -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998	4,989
2113635	「아동복지법」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의 결정·지원	980	4,899
21083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도입	900	4,501
2110282	「전기사업법」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 부담	722	3,609
2109724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 실시	596	2,981
210453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국가 출연근거 마련	497	2,487
21122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337	1,676
2104686	「국립농업박물관법」 -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당	311	1,556
21098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	248	1,239
21136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240	1,200
211114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202	1,009
2109815	「국회법」 - 국회의원의 사적인 사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록	198	988
210898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연구 및 건강검진 실시	180	901
2102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	153	764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102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이자 면제	135	673
211124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123	616
21136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 확대 및 시행 기간 지정	119	593
211028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지원	111	557
2109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위 기 발생 시 지원	111	554
210835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철거비용 보조 또는 용자	108	542
2106490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재해에 황사로 인한 피해 포함	100	500
2111814	「전기안전관리법」 - 원격점검장치 보급 및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시 전기안전점검	99	496
21111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96	482
2103686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공로금 지급	94	470
21098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수입검역 실시	94	468
2113621	「학교급식법」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	92	459
2110250	「스포츠클럽법」 -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91	454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1114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83	418
21111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설치	74	368
211377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74	367
2107286	「원자력안전법」 - 방사선 피해 우려 지역 거주자 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	69	343
21116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계지원금 지급	67	337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2022년 12월 31일로 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	63	316
210719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0	301
21088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57	285
21090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48	241
211376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설치	46	230
21046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 마련	45	226
210004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45	226
210244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44	217
2111695	「농지법」 - 유흥농지조사	43	213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111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확대	41	205
2107727	「공직선거법」 - 후보자 별 사전투표참관인 지정 및 우체국까지 동행	39	192
210581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 국가가 지원	38	188
210513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지원	36	182
210324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위해성평가의 수행·관리 및 기반 조성	29	147
2107836	「거래المل근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현행 15년에서 21년으로 효력 연장	29	145
2111661	「출입국관리법」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숙식비 등 관리비용 부담	29	143
210772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원격교육통계조사 실시	28	140
210898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28	139
21083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센터에의 연계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	24	116
2111658	「체육인 복지법」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	111
211115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1	103
2109355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지정	20	99
2110253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통보	17	83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2~2026)	
		연평균	합계
21090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비 지원	17	83
2109281	「예비군법」 - 비상근 예비군제의 시행에 따른 보상비 소요	16	80
2109812	「고용정책 기본법」 -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15	76
2108344	「고등교육법」 - 대학 인권센터 운영 지원	15	75
211110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	14	70
2111152	「장애인복지법」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	14	70
210307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보안심사	14	69
2114221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3	64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2년 4월 29일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66)

ISBN 979-11-6799-046-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0-001634-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